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89
----------	------

발의연월일 : 2020. 11. 16.

발 의 자 : 김남국·고영인·박 정
이학영·신정훈·진성준
이규민·오영환·윤영덕
김원이·박찬대·주철현
양정숙·강민정·윤준병
김승원·이성만·박성준
이용빈·이병훈·박주민
김홍걸·황운하·김경만
김철민·김용민·양기대
김영배·김진애·윤재갑
의원(3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 포함될 당위성이 있는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 4·16세월호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고자 함.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그러나 일부 피해자가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선고된 판결에 따르면,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의 액수보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더 많아 두 집단간의 배상액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위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향후 진행될 사업에 대한 추진력 약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지급 받은 배상금보다 현행법에 따라 지급 받은 배상금 등이 적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4·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국가와 지자체 간의 운영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이에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하고자 함.

그리고 현행법은 추모사업과 재단이 진행해야 사업의 범위, 재단에 출연 및 보조 방법과 기간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모사업과 재단의 사업에 4·16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재단에 기한 없는 출연을 보장하고자 함.

끝으로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피해자 및 대리인의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 제공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이에 진상조사 후에 기록물 관리에 대한 방법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피해자의 정의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수습 및 지원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 4·16세월호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지급 받은 배상금보다 현행법에 따라 지급 받은 배상금 등이 적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규정함(안 제35조).

라. 국가등이 시행해야 하는 추모사업 등의 목적에 ‘안전사고 예방교

육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6조제1항).

마. 국가등이 시행하는 추모사업 등에 추모기념관의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 및 그 밖의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신설).

바.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하는 추모기념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사. 4·16재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식을 출연으로 하고, 5년의 지원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40조제1항).

아. 4·16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에 관한 사업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을 포괄하도록 규정함(안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자. 공공기관이 수집 및 보존하는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는 기록물임을 명시하고,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의 사본을 4·16재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2제1항 신설).

차. 피해자에게 공공기관이 수집 및 보존하는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공공

기관 및 4·16재단에 피해자의 열람요구에 대한 협조 및 편의제공 의무, 피해자가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요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안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수습 및 지원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이하 “부상 자원봉사자”라 한다)

마. 4·16세월호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이하 “단원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던 학생

바.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

제2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배상금 등의 차액 추가지급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제15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배상금 등이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피해자가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형 재난 사고에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 받은 손해배상금보다 적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가등이”를 “국가가”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방교육을”을 “예방교육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추모기념관의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

6. 그 밖의 추모,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연구 관련 사업

② 추모기념관은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립 후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에 관한 사업

5.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제5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6조의2(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에 대한 조치)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며,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사본을 추모기념관에 송부하여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는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공공기관 및 4·16재단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 및 4·16재단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해당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4·16재단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피해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요구와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공개 및 송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절차, 제4항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 및 지정절차, 그 밖에 기록물의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금 등의 차액 추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신청인에게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u>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u> <u>된 구조·수습 및 지원활</u> <u>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u> <u>봉사자(이하 “부상 자원봉</u> <u>사자”라 한다)</u>
<신 설>	<u>마. 4·16세월호참사 당시 경</u> <u>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u> <u>(이하 “단원고등학교”라</u> <u>한다)에 재학 중이던 학생</u>
<신 설>	<u>바.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u> <u>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u> <u>교직원</u>
<u>라. (생 략)</u>	<u>사. (현행 라목과 같음)</u>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배상금 등의 차액 추 <u>가지급에 관한 특례) ① 국가</u> <u>는 제15조에 따라 신청인에게</u>

	<p><u>지급한 배상금 등이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피해자가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형 재난사고에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보다 적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제35조(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① (생략)	제35조(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는 <u>국가등이</u> 운영하여야 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 <u>국가가</u> ----- ----- ----- -----.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u>예방</u>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 ----- ----- <u>예방</u>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3. · 4. (생략)

<신설>

<신설>

제40조(4·16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

교육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1. ~ 2. (현행과 같음)

3. 추모기념관의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

4.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추모,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연구 관련 사업

② 추모기념관은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0조(4·16재단에의 출연 등)

① -----

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4·16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4. (생략)

② (생략)

<신설>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

1. ~ 3. (현행과 같음)

4.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에 관한 사업

5.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에 대한 조치)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며,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사본을 4·16재단에 송부하여 추모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공공기관 및 4·16재단에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및 4·16재단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해당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4·16재단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요구와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공개 및 송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절차, 제4항에 따른 대리인
의 범위 및 지정절차, 그 밖에
기록물의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